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54
----------	------

발의연월일 : 2025. 1. 13.

발 의 자 : 어기구 · 박희승 · 이개호
박홍배 · 박수현 · 조인철
소병훈 · 안호영 · 주철현
이연희 · 이정문 의원
(11인)

제안이유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식량 공급망을 둘러싼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 전 세계는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 주목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8%(2020년 기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고,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임.

상황이 이러함에도 오히려 농가소득(2022년)은 평균 4,61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2022년)은 949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6.8%나 감소하였음. 이러한 농촌지역의 소득 감소 외에도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성이 떨어져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업인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
도록 함(안 제4조).

다. 농업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농업인의 권리를 규정함
(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
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농업인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농업인소득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농업인기초연금,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3조, 제1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 지원, 영농형태양광 지원,
농업인 고용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

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지원, 농업기계 자금 지원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자재 지원 등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업인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농업인이 다른 산업종사자와 동등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 소득보장”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이 농촌지역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지

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의 권리) 농업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인 소득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농업인소득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 방향
2. 농업인 권리 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
3.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농업인소득보장위원회) ① 농업인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인소득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2.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국가는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필수농자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농약,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농업기계 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농업기계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농업인기초연금 지급) 국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인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농외소득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

야 한다.

제15조(농업인안전보험 지원) 국가는 농업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영농형태양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안보의 확보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영농활동과 태양광발전사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농업인 고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